

“돈 없다” 외치던 아르헨 대통령, 본인 월급 48% 인상

논란 일자 전 정권 탓하면서 무효화 불구, 논란 지속 현 정부 지지 의원도 “자신이 서명한것도 모르냐” 비난

“돈이 없다”며 정부 예산 긴축 정책을 펼치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자신의 월급과 행정부 고위 공무원 월급을 48% 인상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 파히나12, 암비토 등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본인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부 고위 공무원 월급 대통령령에 의해 2월 월급 602만 페소(923만 원)를 수령했다.

1월 월급 406만 페소(세금포함 624만 원)에서 48%나 '셀프 인상'한 액수였다.

이번 셀프 급여 인상은 이번 주 국회의원 월급 30% 인상 소식에 국민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국회의원 월급 인상에 대해 밀레이 대통령

이 크게 화내면서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며 무효화를 지시한 시점에 불거졌다.

밀레이의 발언에 빅토리아 톨로사 파스 전 사회개발 장관이자 현 하원의원이 개인의 SNS에서 “우리는 국회의원의 월급 인상 무효화 법안과 동시에 행정부 고위급 인사 월급 인상 무효화 법안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지금 절약을 내세우면서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2월29일 서명한 대통령령에 의해 본인과 각료들 월급을 48%나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밀레이 대통령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2007-2015 대통령, 2019-2023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부통령 역임)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10년 서명한 대통령령에 의해 자동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자신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해당 대통령령을 폐지하겠다고면서 모든 잘못을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밀레이 대통령이 1월과 2월에 서명한 대통령령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온라인에 공개되자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들끓었다.

그의 서명 없이는 행정부 고위급 관료 월급은 인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보에 게재된 대통령령에 그의 서명과

니콜라스 포세 수석장관과 산드라 페토 벨로 인전자원부 장관 서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관보는 갑자기 정부 온라인 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가 고의로 숨긴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일었다.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은 “밀레이 대통령은 본인이 서명하는 대통령령을 읽어보지 않느냐”면서 “대통령이 서명해 월급을 수령했고 그걸 사람들이 알아버렸다는 걸 인정하라”고 말했다고 암비토가 보도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도 “지난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내가 대통령령 837/2020으로 고위급 관료의 월급은 공무원 월급 자동 인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에 합세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주말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행정부 고위 관료 월급 인상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카스타(기득권, 기존 정

치인)를 위해 서명한 대통령령을 폐지하면서 무효화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본인이 서명한 대통령령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면 읽지 않고 서명한 것인가”, “우리보고는 돈이 없다고 교사, 공무원, 의사, 은퇴자들 월급은 거의 올려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월급은 한 번에 48% 인상하면서 발뺌하냐?”라는 일반 네티즌의 의견 뿐만 아니라 현 정부를 지지하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미겔 앙헬 파체토 야당 하원의원까지도 “밀레이 대통령이 자신이 서명한 것이 뭔지 모르면 문제가 있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난했다.

극우 자유경제 신봉자인 밀레이 대통령 취임 후 물가는 폭등하고 있으며 취임 후 3개월간 누적 물가상승률은 65% 수준까지 치솟았고 빈곤율은 57%로 급등했다. /연합뉴스

美, 이스라엘엔 무기·가자주민엔 구호품...‘병주고 약주는’ 역설

자국 지원 무기로 폭격받는 이들 돕겠다고 작전 펼쳐...이례적 상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허마스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해온 미국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해상으로 구호물자를 전달하기 위한 임시항구 건설 작전에 나서면서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미국은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에 무기 등 군사지원을 해왔는데,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는 가자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제공하는 작전도 진행해 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지원하기 위해 가자 해안에 임시항구를 건설하라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명령이 미군의 인도주의 지원 역사를 새로운 국면으로 몰고 갔다고 전했다.

이전에도 미국은 아이티나 라이베리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위기 상황에 처한 민간인들에게 구호품을 제공하고자 군대를 동원한 적이 있다.

하지만 미군이 지원한 무기로 폭격



계속된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이 구호식품과 물을 배급받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구호품 지원 작전을 진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NYT는 짚었다.

이런 지적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사용하는 무기 등 군수품을 계속 제공하는 한편,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

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다.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병 주고 약 주는’ 두가지 일을 동시에 하게 된 셈이다.

한편 인도적 구호물자를 실은 미군의 프랭크 S. 베손 물류지원함이 가자

지구를 향해 출발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해상으로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지 36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프랭크 S. 베손호가 버지니아주의 랭글리-유스티스 합동기지를 떠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탄자니아서 바다거북 고기 먹고 9명 사망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자치령인 잔지바르에서 바다거북 고기를 먹은 뒤 9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잔지바르 군도 내 펠바섬에서 바다거북 고기를 먹은 주민 중 어린이 8명과 성인 1명이 숨졌으며 78명이 입원했다고 밝혔다.

성인 사망자 1명은 사망한 어린이 중 1명의 모친이며, 부검 결과 사망자들이 전원이 바다거북 고기를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에 따르면 주민들이 바다거북 고기를 섭취한 시점은 지난 5일이다.

잔지바르 당국은 재난 관리팀을 현장에 파견해 주민들에게 바다거북을 먹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바다거북 고기는 잔지바르에서는 일종의 별미로 여겨지지만 켈로니톡시즘(chelonitoxism)이라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이로 인한 사망자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인 68%,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명 충분치 않아”

일본인 10명 중 7명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내외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여론조사회가 올해 1-3월 전국 18세 이상 성인 1천788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염수의 방류 방법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내외 설명이 “충분하다”고 평

가한 응답자는 30%에 그쳤다.

68%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머지 2%는 무응답이었다.

해양 방류 후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51%가 ‘우려한다’, 49%는 ‘우려하지 않는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향후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5%가 ‘단계적으로 줄여 장래에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답했고, ‘단계적으로 줄이지만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어 일정 수를 유지해야’(33%)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기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부패